

“구 의원에 공무원까지” 불법 주정차 적발자료 삭제 ‘파장’

광주 서구 공무원 6명, 차량 228대 단속자료 임의삭제 본인·가족부터 공무원·구 의원까지 과태료 면제 ‘특혜’ 국무조정실도 불시 감사 착수...“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광주 서구 공무원들이 권한에 없는 직무상 부정 행위를 통해 본인·가족·지인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임의로 삭제,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6명이 지난 2018년부터 2년여 간 주정차 위

반이 적발된 본인·가족·지인 소유의 차량의 단속 자료를 임의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자료 삭제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면한 차량은 228대다. 다만 이 중 70여 대는 중복 단속·변호판 인식 오류 등이 확인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구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업무상 전산시스템 내 단속 자료 삭제 권한 자체가 없다.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셈이다.

의혹이 불거진 공무원 직원들은 서구 지역 고정형·차량이동형 단속 카

메라를 통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가려내는 업무를 맡았다.

업무 중 검수 단계 전후로 과태료 부과와 근거가 되는 단속 자료를 임의 삭제·누락했다.

해당 직원에게 단속 자료 삭제를 부탁한 사람 중에는 서구 공무원과 서구의회 의원이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행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이다. 자진 납부 기간에 과태료를 내면 면제 혜택을 받아 3만2000원이 부과된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들어

와야 할 세외 수입이 누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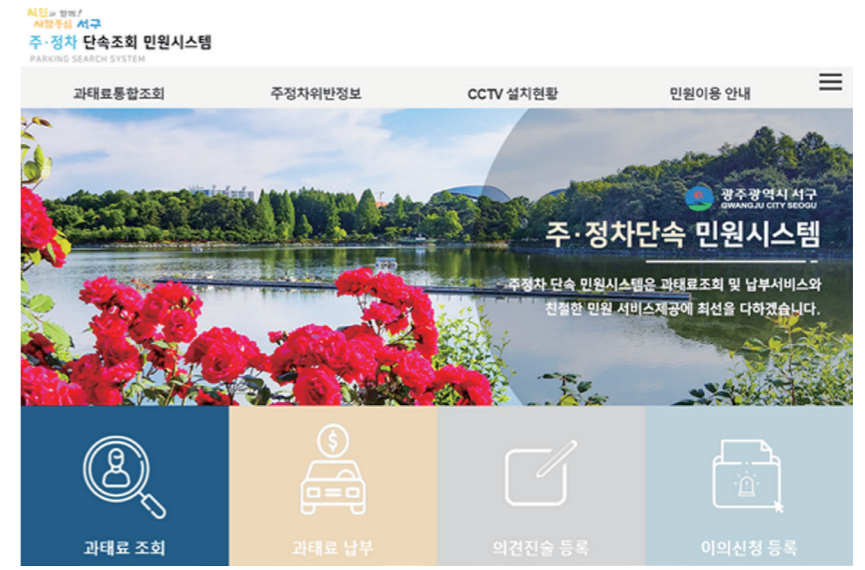
또 교통 지도·단속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버리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법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경북 김천에서는 공용 차량·청탁 민원인 차량 등 79대의 단속 촬영 자료를 삭제한 전·현직 공무원 5명이 공용서류 등 무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에게 단속 열의를 요청한 6명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도 지난달 19일 서구로부터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올해 11월18일까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전체를 확보, 불시 감사에 나섰다.

서구 감사담당관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받는 대로, 적정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업무상 부정 행위를 확인했다. 전산 체계상 허점은 없는지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권고 처분을 성실히 이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광주와 전남 일부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14일 오전 전남지역 체육단체가 무안공항에서 “광주 민간공항 무안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체육인 “광주시, 민간공항 무안이전 약속 이행” 촉구

전남체육회 등은 이날 오전 무안군 무안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체육인'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이용섭 광주 시장은 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 문제와 함께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2021년 광주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의 문제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

이다”며 “무안국제공항은 처음부터 광주 민간공항의 기능을 포함하는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계획되었으며 지난 2018년 양 시도가 민간공항 통합을 합의해 국가계획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2021년 민간공항 통합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활주로 연장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확충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군공항 이전은 2014년 광주

시가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두 문제가 전혀 별개라는 것을 인정하고, 광주 민간공항 무안 이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그래야만 군공항 이전 문제도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반드시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이행하고 군공항 문제는 향후 협의체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환기자

전남대병원 신경외과·중환자실 또 격리

간호사 2명·입원 환자 1명 코로나 19 추가 감염 지난달 1일 동일집단 격리 해제 이후 13일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안제세를 보이던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또 의료진에 이어 중환자실 환자가 추가 감염돼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처됐다.

광주시 방역당국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13일 오후 늦게 1병동(본관동) 신경외과 간호사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4일 오전 전수검사에서 중환자실 입원 환자 1명이 추가 감염됐다.

이들은 광주 821, 822, 824번으로 분류됐으며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병원내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됨에 따라 1병동 5층 신경외과 중환자실을 동일집단 격리 조치했다.

신경외과 중환자실에는 7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으며 의료진은 30여 명으로 알려졌다.

외래와 응급실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확진자가 나온 1병동 전체에 대

한 동일집단 격리 여부는 위험도 평가가 끝난 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중환자실 입원환자 외 간호사 등과 밀접 접촉한 의료진과 환자 등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의료진 2명의 감염경로를 역학조사 중이다. 이들은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동일집단 격리로 인해 지난달 27일까지 자가격리를 했으며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들 중 1명은 지난 1~2일 KTX를 이용해 서울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중환자실에서 정상근무했으며 12일 인후통과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13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의료진의 동선을 파악한 결과 중환자실에 머물렀고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의료진이 지

난달 발생한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의 집단감염에 의한 감염인지 또는 서울에서 확진자를 접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들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 감염을 염두에 두고 해두고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서울을 다녀온 뒤 지난 12일까지 정상 근무했다”며 “9일간 병원내 노출이 이뤄져 추가 감염 우려가 높은 편인만큼 밀접접촉자 범위를 지난 1일 이후 퇴원환자까지 적용해 추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대병원 1병동에서는 지난달 13일 의사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환자와 보호자, 입주업체 직원 등 100여명 이상 감염됐다.

1병동은 동일집단 격리, 병원 전체 외래진료·수술·응급실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외래진료는 지난달 26일, 응급실, 동일집단 격리는 지난 1일 해제됐다.

전남대병원 안영근 선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캠페인까지 하며 집단감염에 사과했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